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 부담 줄인다” 민·관 머리 맞대 정신질환 입퇴원 절차 개선

- 입퇴원절차개선민관협의체 첫 회의 개최 -

- 분야별 전문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등 참여해 입퇴원 절차
개선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월 12일(화) 오후 5시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 주재로 「입퇴원절차개선민관협의체」(이하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입퇴원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협의체는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6.3.27. 발표)의 후속 조치로, 2027년부터 추진 예정인 입퇴원 절차 개선 시범사업의 운영 모형과 절차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협의체에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이 관계기관 간 협업을 총괄하고 주요 개선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함으로써, 현장의 어려움을 보다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입퇴원 절차상 애로사항과 그간 정신건강복지 정책에 서 다뤄온 입퇴원 절차 전반 운영 과정의 개선 필요사항을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에서 검토한 대안에 대해 당사자와 가족을 비롯한 현장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여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선안에서 즉시 이행이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조치하고,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날 회의에서 “입퇴원 절차는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으로 진입하고 지역사회로 연계하는 중요한 제도이다”라며, “협의체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당사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공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입퇴원절차개선민관협의체 개요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책임자	과 장	우경미	(044-202-3860)
		담당자	사무관	최정상	(044-202-3862)
			사무관	황지숙	(044-202-3866)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책임자	과 장	이다영	(02-2204-0113)
		담당자	사무관	이지혜	(02-2204-0320)
담당 부서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재광	(02-3150-2046)
		담당자	경 위	김양효	(02-3150-1355)
담당 부서	소방청 119구급과	책임자	과 장	김인균	(044-205-7630)
		담당자	소방경	임지용	(044-205-7632)



□ **목적**

- 입퇴원 절차상에 공적책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 소요 제기에 따라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6~'30년)에 관련 내용 반영
- 전문가·현장 의견을 중심으로 절차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정신질환 당사자·가족의 의견까지 반영하여 제도 개선안 마련 계획

□ **구성 · 운영(안)**

- **(역할)** 입퇴원 절차의 공적책임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사항 등 의견 수렴*, 입퇴원 제도개선안 마련 등

* 입퇴원 절차 개선과제 논의 및 현장 애로 해소 등

- **(방향)** 관계기관·지자체·민간전문가 등 참여하여 현장에서 실제 개선이 가능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 개정 등 논의

- **(구성) 총 20인 이내로 구성**

- **(정부위원)**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국립정신건강센터, 경찰청, 소방청 등
- **(민간위원)**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등

- **(운영)** '26.12월까지 운영하고, 추가 논의 필요시 연장하여 운영

- **(주요 논의사항)** 입퇴원 절차 주요 현황, 개선 필요사항, 공공이송체계, 입퇴원 관련 공공인프라 마련 및 치료비지원 등 논의